

특집 : 정권교체와 정치보도 / 정권교체와 청와대 취재 보도 시스템

330호 : 20-23

기자들 항의 부른 '절충형 브리핑제도'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중앙기자실에 출입기자로 등록이 돼 있는 중앙 일간지, 방송, 통신 기자들은 한 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일반적으로 출입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봉쇄하고 있으니 이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출입 봉쇄를 해제하라'

성명이 발표된 날은, 김 대통령 취임 이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기자들의 성명 발표는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을 취재하는 청와대 기자들이 정권을 상대로 항의성명을 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성명의 내용에 "이같은 청와대의 봉쇄조치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항의성명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취재의 관행과 대통령 취임 전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다른 출입처와 마찬가지로 각 언론사에서 1~2명의 출입기자를 등록시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을 취재하고 있다 (지방언론사 기자실과 사진·카메라 기자실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중앙언론사 취재기자만 설명한다.).

중앙언론사 기자실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와 통신사는 2명, 신문 및 라디오 방송사는 1명씩 등록돼 있다. 이들은 경호실의 엄격한 신원조치를 거쳐 출입기자임을 증명하는 비표를 발부받는다. 철저하게 출입처 개념을 바탕으로 깔고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외신기자들과 창간이 늦은 지방언론사들이 청와대 출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기자실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추가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등록된 취재기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당번 개념으로 2명씩 짝을 지어 대통령의 각종 행사에 '풀 기자'로 참석해 대통령 근접 취재를 하는 일이다. 풀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모든 내용을 다른 기자들에게 제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행사취재 기자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쪽 사정에 의해 오래전부터 정착된 제도다.

또 한 가지는 비서실에 드나들며 청와대 비서관들을 취재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평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풀 기자 이외에는 출입 및 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청와대 '신관'과 '동별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을 간접취재하는 방법 밖에 없다. 비서실장 취재도 비서실 출입이 전제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세번째는 청와대 대변인을 견하고 있는 공보수석의 브리핑을 듣는 일이다. 정권교체 이후 공보수석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하루에도 수차례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입장만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인 2월 26일부터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켰다. 김중권 비서실장과 박지원 공보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몇 차례 간접

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취재망 일부 마비

청와대는 비서실 출입금지과 동시에 몇 가지 보완조치를 취했다. 우선 박지원 공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각종 행사와 발언을 수시로 기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정권교체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본관 및 비서실과 분리돼 있는 춘추관 건물에서 박지원 수석이 불러주는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이 주 임무가 된 것이다.

청와대측은 또 공보를 제외한 5명의 수석비서관(정책기획, 정무, 경제, 외교통상, 사회복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김종권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런 체제를 ‘브리핑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출입기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었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와대 간부들이 비서실 안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비서관들은 정권교체 초기라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인사청탁을 비롯해 각종 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기자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

또 청와대 기자들이 매일 매일 달라지는 현안과 관련해 비서관들을 취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언론의 취재망 일부가 마비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알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기자들은 경제와 외교 등 주요현안에 대해 박지원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 대변인이 그런 분야에 대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기자실이 외신기자들이나 잡지기자들에게 개방된 것도 아니다. 출입기자 등록이 안돼있는 언론사 기자들은 여전히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듣지 못했다. 미국 백악관식 브리핑 시스템은 브리핑 현장을 모든 언론에 개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새로운 브리핑 시스템은 경호실의 신원초회를 통과해 들어온 기자들에게만 브리핑을 한다는 이상한 절충형 제도였던 것이다.

기자들은 3월 6일 김종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표를 파견해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별 반응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런던을 방문중 이던 4월 4일 기자들은 김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시 4월 14일 김종권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기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 실장은 문제를 새삼 깨달았다는 듯 바로 다음날 대통령께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김 실장의 조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15일 아침 열린 기자들의 회의에서는 곧장 성명을 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입증을 일제히 반납하고 풀 기자로 대통령을 취재 하는 일도 거부하자는 초강경론도 나왔지만 청와대측의 대처를 지켜보고 추가 대응조치의 수위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명분에서 기자들의 논리에 밀리던 청와대는 기자들의 강경기류를 파악한 뒤 결국 부분적 개방이라는 협상안을 들고 나왔다. 기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5월 1일부터 하루 두 차례 오전과 오후에 한 시간씩 비서실에 들어가 수석비서관들을 취재하고 있다. 성명이 나온지 보름만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석비서관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사무실에는 드나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이 맺어졌다. 이에 따라 수석비서관들의 주례 브리핑은 없어졌다. 하지만 주로 본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행사 내용은 박지원 대변인의 ‘입’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분개방 조치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백악관식 브리핑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자들의 취재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 청와대가 출입기자들 에게 비서실 출입을 느닷없이 금지시킨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었다. 브리핑 시스템의 도입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몇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하다.

브리핑제도의 전제조건

먼저 공무원들이 진상을 거짓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보다 훨씬 큰 영역인 문화의 문제다. 과거 정권에 의해 각종 사건이 숨겨지고 왜곡됐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어느정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 ‘내부 고발자’가 아직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에서 공직자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그 진상이 은폐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언론이 브리핑 시스템을 수용할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도 문제다. 브리핑룸에는 매체의 우열에 관계없이 모든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우선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적 평등으로는 최소한의 질서조차 유지할 수 없다. 청와대 브리핑장에서 대변인이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앞자리를 배려하고 질문의 우선권을 주었을 때 다른 언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을 정도의 ‘양해 문화’가 언론계 내부에 형성돼야 하는 것이다.

브리핑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부의 체제개편도 필요하다. 국정현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정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해야 한다. 청와대의 모든 회의 내용은 대변인에게 보고돼야 하며, 아주 중요한 회의에는 대변인이 직접 참석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정현안의 핵심을 대변인이 정확히 파악한 뒤에야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의 주제를 놓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변인 재목을 발탁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주요 비서관들이 집무실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앞 마당과 뒷 통로에 사진기자들을 위한 포토라인이 있어 항상 집무실 출입자들을 지켜볼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개와 함께 마당에 나와 산책을 하는 장면이 보도되는 것도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진국처럼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의 명단을 매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일상적인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했던 청와대의 조치가 100% 부당한 일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기자들이 비서들의 집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경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한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고 비서들이 업무에 방해 받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취재 시스템은 언젠가 브리핑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공무원의 집무실에는 기자들이나 민원인의 출입이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

대안이 없다

문제는 기자들이 공무원들의 집무공간을 드나들지 않아도 정부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전제돼

야 하는 것이다. 브리핑 시스템의 도입은 우리나라 언론사의 취재관행과 편제를 대 폭 변화시킬 것이다. 완전한 브리핑 시스템에서는 출입처와 출입기자는 의미가 없어진다.

현행 청와대 취재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당기간 이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측이나 기자들 양쪽 다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93년에도 청와대의 비서실 봉쇄조치가 있었다. 기자들은 3개월 뒤 집단면회를 신청해 일단 비서실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 ‘시위’ 방식으로 청와대측의 항복을 받아냈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기자들을 멀리 떼어 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정권이 여에서 야로 교체됐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또 국정홍보 시스템과 일상적인 대통령 집무실 감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계획했던 완전한 브리핑 시스템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차장